

●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-145호

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7월 26일

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

##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및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신청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562호, 2023. 7. 18. 공포, 2023. 10. 4. 시행)됨에 따라,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·정비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연동 관련 서면 기재사항 구체화(안 제3조제1항제7호)

- 1) 개정법 제3조제2항제3호는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.
- 2) 법률에 명시된 목적물등의 명칭, 주요 원재료, 조정요건, 기준 지표 및 산식 외 그 밖에 연동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의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, 조정일,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함.

나. 연동 관련 서면 기재사항의 예외인 단기계약의 기준(안 제3조제2항)

- 1) 개정법 제3조제4항제2호는 연동 관련 서면 기재사항의 예외인 단기계약의 기준을 90일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.
- 2)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90일로 정하되,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다. 연동 관련 서면 기재사항의 예외인 소액계약의 기준(안 제3조제3항)

- 1) 개정법 제3조제4항제3호는 연동 관련 서면 기재사항의 예외인 소액계약의 기준을 1억원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.
- 2)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1억원으로 정하되,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라.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방법, 절차 및 지원시책(안 제6조의6)

- 1) 개정법 제3조의6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를 선정·포상하는 지원시책을 수립·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함.
- 2)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선정방법 및 절차는

미리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며,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실시하는 각종 시책 추진 시 가점을 주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고,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마. 연동지원본부의 사업내용 구체화(안 제6조의7)

- 1) 개정법 제3조의7제2항은 연동지원본부가 원재료 가격정보 제공, 연동 실적확인,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, 그 밖에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필요한 사업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.
- 2) 연동지원본부의 사업으로서 연동 관련 홍보, 우수사례 발굴, 통계작성·관리,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, 원가분석 지원,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개발 지원 등을 추가함.

바. 연동지원본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(안 제6조의8 및 별표6)

- 1) 개정법 제3조의7제4항은 일정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동지원본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.
- 2)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동지원본부를 사업별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조직·인력·사무공간 등 연동지원본부의 지정기준을 규정하며, 연동지원본부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, 연동지원본부의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실적 제출의무, 연동지원본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.

사. 연동 관련 벌점 부과기준 마련(안 별표3)

- 1) 개정법 제26조제2항은 벌점 부과대상이 되는 범위반행위에 연동 서면 기재사항 위반(법 제3조제2항), 성실 협의의무 위반(법 제3조제3항), 서면 기재사항 예외 위반(법 제3조제4항), 탈법행위(법 제3조제5항)를 포함함.
- 2) 원사업자가 미연동 합의를 강요·유도하는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벌점 5.1점을 부과하고, 그 밖의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벌점 3.1점을 부과하며, 그 외 범위반행위(연동 서면기재사항 위반, 성실 협의의무 위반, 미연동 합의 후 그 취지 및 사유 미기재)에 대해서는 현행 벌점 부과기준 체계에 따라 시정 조치 유형별로 0.25~2.0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함.

아. 연동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(안 별표5)

- 1) 개정법 제30조의2제5항은 연동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, 동조 제4항은 연동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며,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함.
- 2) 연동 서면 기재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고, 연동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3천만원(1차), 4천만원(2차), 5천만원(3차)을 부과하는 한편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최대 50% 범위에서

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자.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요건 완화(안 제9조의2)

- 1) 개정법 제16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온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신청요건을 삭제하였음.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행협상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절차가 대행협상 활성화의 장애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.
- 2)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신청요건을 삭제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없이도 대행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대행협상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함.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(정부세종청사)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
- 전자우편 : yhshin55@korea.kr
- 팩스 : 044-200-4977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(전화 (044) 200 - 4947, 팩스 (044) 200-497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